

# 헌재, 3차례 추가 기일 종일 심리...尹 탄핵심판 빨라진다

### 8차 변론기일 무더기 지정·주 2회 기일 진행 등 신속 재판 의지 윤측 강력 반발에도 “충분하게 논의했다·변경 않겠다” 선 그어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8차 변론기일을 무더기 지정하는데 이어 주 2회 기일을 진행하고 추가 3차례 기일 동안 종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에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무리한 기일 지정이라고 항의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아 신속재판에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이 체포 상태로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피청구인이 불출석하더라도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헌재법에 따른 것이다. 이날 증인 채택이 일단락 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국회 법률대리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광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 고위직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위법한 계엄지시 사항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5명을 모두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장관의 증언으로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뒤집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의 구상으로 보인다. 23일 진행될 4차 변론부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판 사령관과 조 정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 홍 전 차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증인신문 시간은 1인당 90분이 배정됐다. 헌재는 다음 달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해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증인신문시 김 전 장관과 대질신문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 추후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기존 5차까지 지정돼 있던 변론기일에 더해 3회차 기일(2월 6·11·13일)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추가 지정 기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중

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변론 일정이 무리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행은 “과거 선례 등을 고려해 재판부 평의를 거친 결과”라면서 “충분한 논의 결과에 따라 (지정한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며 낸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헌재는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지난 13일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 결정과 수사 기록 인증송부 촉탁 신청 채택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며 “재판부 평의를 거쳤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회의록은 속기로 작성돼 국회의장, 위원장 등이 서명 날인하는 등으로 그 진술의 임의성 기재 내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상대로 신청한 사실 조사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이번 계엄은) 평화적 계엄이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은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조화란 공공기관에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 측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 제출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12·3 계엄 당일 ‘체포조 지원’ 요청 받은 경찰 국수본 “누구 체포?”...방첩사 “한동훈·이재명”

### 조지호·김봉식 공소장 내용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았던 경찰 국가수사본부 가 체포 대상 정지인 명단을 방첩사로부터 전달받은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95쪽 분량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에는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당일 밤 11시 32분부터 20분간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두 차례 나눈 통화 내용이 적시됐다. 구 과장은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되도록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계장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것 인니까”라고 물었고, 구 과장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고 답변했다. 특정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 계장이 이후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 조청관은 밤 11시 59분께 조지호 청장에게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이 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했다. 윤 조청관은 우중수 국수본부장에게도 전화로 방첩사 지원 요청과 그에 따른 명단을 조 처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제주도 출장 중이던 우 본부장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 윤 조청관을 크게 질책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이후 영등포경찰서 형사 60여명은 당시 국회 인근에 모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수본은 그간 현장에 파견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첩사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 수조차 총전소 앞에 영등포서 형사 60여명이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회 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간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서울청 간부가 국회 전면 출입 통제에 반대했지만, 조 청장이 이를 강행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밤 11시 41분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국회의원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 맞지 않는다”며 “경찰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다. 임 국장을 통해 보고받은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며 국회의원 출입 차단 지시를 유지했다. 경찰 병력을 몰래 이동시키려고 했던 행적도 드러났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또 밤 9시 16분께 광화문 타격대를 밤 10시까지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합동 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자신이 맡겠다고 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새로 공개됐다. /연합뉴스

## 헌재,尹측 2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 ‘불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에 16일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재현 헌재 공보관은 언론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가 기일을 변경할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법

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대현(73·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74)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이다. 조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해 방어진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